미래사회
Journal of Future Society
2026. Vol. 17, No. 3, 458~469.
https://doi.org/10.22987/jifso.2026.17.3.458

중견국(Middle Power)과 과학기술외교*

신 동 민**

외교부

본고는 “중견국은 무엇인가?”, “중견국의 과학기술외교는 무엇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인가?”와 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답을 찾는 데 그 주된 목적을 둔다. 본고는 문헌 연구에 기초하여 국제정치 이론과 실제 측면에서 논의되어 온 중견국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정치에서 그간 중견국 논의를 선도해 온 캐나다와 호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들 국가가 중견국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간 중견국은 주로 다자주의에 기초하여 ‘좋은 국제시민’으로서 그 기능이 논의되어 왔다. 한편, 최근에는 권력정치(power politics) 등 국제정치 현실주의 측면에서 중견국 개념을 조망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의 연장선에서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는 과학기술 관련 중견국 논의가 크게 두 가지 경향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전통적인 중견국 논의에 부합하게, UN, G20 등 다자 무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관련 거버넌스 논의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견국들이 각자 점한 위치와 장점에 기초하여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의다. 이러한 논의는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견국이 자신의 능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중견국 논의에 기초하고 있다. 스스로 중견국의 정체성을 표명하는 국가들의 논의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이들 국가가 국제정치에서 과학기술의 영향력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틈새외교(niche diplomacy) 영역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중견국의 외교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함의를 제공한다.

주요어: 과학(기술)외교, 중견국, 국제정치이론, 캐나다, 호주

---

* 본고는 전적으로 저자 개인 견해에 기초함을 밝힙니다.

** 주저자: 신동민/외교부/서울시 종로구 도렴동 60/E-mail: dshinresearch@gmail.com.

Ⅰ. 들어가며

중견국과 과학기술외교(Middle Power and Science Technology Diplomacy). 본고는 중견국과 과학기술외교라는 두 개의 개념이 만나는 지점을 다룬다. 최근 이 두 개념은 외교 이론과 실무 차원에서 풍부하게 논의되고 있다. 2026년 1월 캐나다 카니(Mark Carney) 총리의 다보스 포럼 연설을 계기로 중견국 개념은 다시 한 번 국제정치의 주요 논의 주제로 부상하였다. 한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필두로 과학기술은 기술의 영역을 넘어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과학기술외교'라는 개념이 보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오늘의 국제정치다(신동민, 박경렬 2025).

이러한 배경 아래, 역설적으로 본고는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해보고자 한다. "중견국의 과학기술외교"를 언급할 때, 의미하는 중견국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는 중견국과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이는 중견국의 의미는 같은가? 강대국 및 약소국과 대별되는 중견국의 과학기술외교는 무엇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인가? 이 문제 제기는 특히 의미가 있는데, 최근 한국의 과학기술외교 추진 방향으로 중견국의 입장에서 관련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다수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전재성 2026; 김상배 2025; 윤정현 2025). 또한 중견국의 시각에서 한국에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는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견국과 중견국의 과학기술외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자연히 관련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수반될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논의되는 과학기술외교 개념과 더불어 '중견국'은 국제정치와 외교정책의 전통과 맥락 위에서 학술적, 실천적으로 축적, 발전되어 온 개념이다. 캐나다와 호주와 같이 다양한 맥락에서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국가들은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관련 언급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고는 국제정치 이론과 실제 측면에서 논의되어온 중견국 개념을 소개하고, 국제정치에서 그간 중견국 논의를 선도해온 캐나다와 호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중견국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 중견국의 시각에서의 과학기술외교 추진 방향에의 함의를 논의할 것이다.

Ⅱ. 중견국(middle power)이란?: 국제정치학과 외교의 맥락에서

1. 외교사의 맥락

오늘날 외교 실무와 이론 차원에서 종종 언급되고 있는 중견국은 사실 서양 국제정치를 중심으로 한 외교사 맥락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는 개념이다. 스페인 코미야스 대학(Universidad Pontificia Comillas)의 국제정치학자 아본단자(Gabriele Abbondanza)는 외교사 시각에서 중견국 개념 발전을 검토하였는데, 예컨대 그는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의 전후 처리(post-war order) 문제를 다룬 비엔나 체제(Congress of Vienna) 형성 과정에서 중견국의 한 연원을 찾는다(Abbondanza 2020).

나폴레옹 전쟁의 전승국인 영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러시아와 패전국 프랑스는 비엔나 체제를 주도한 핵심 강대국이었다. 이 4대 전승국과 프랑스는 나폴레옹 전쟁의 종전조약인 쇼몽조약(1814.3)을 체결하였다. 한편, 포르투갈, 스웨덴, 스페인과 같은 국가는 쇼몽조약에는 체약국으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나폴레옹 전쟁의 전후 처리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파리조약(1814.5)에는 서명 당사국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4대 전승국에 비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컨대 강대국 대표들이 진행한 비공식 협의(informal discussions)

에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었거나, 강대국이 논의한 사항에 대해 일부 조정 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쇼몽조약과 파리조약에는 서명하지 못한 채, 전후 처리 과정에 대표단만 파견한 국가들도 있었고, 자연히 이들의 영향력은 파리조약 당사자들에 비해 제한되었다. 당시 포르투갈, 스웨덴, 스페인 등은 스스로를 중견국으로 칭하지는 않았지만, 아본단자는 이들 국가를 오늘날 중견국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즉 비엔나 체제는 전승국인 4대 강대국 중심질서 속에서 일정한 외교적 지위와 참여권은 있으나, 전체 전후 처리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된 중견국 그리고 이보다 못한 약소국으로 구성된 위계적(power hierarchy) 체제였던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및 최근의 관점

한편, 현대적 의미의 중견국 논의가 본격화된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 과정에서다. 캐나다와 호주가 논의를 주도했는데, 당시 캐나다 수상 맥킨지 킹(Mackenzie King)은 새로운 국제 회의체에서는 강대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발언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캐나다를 포함한 중견국가들이 그들의 힘과 책임을 발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중견국성(Middlepowerhood)'을 역설하였다. 호주 역시도 세계 제1, 2차 대전시 태평양에서의 역할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협의체에서의 독자적인 대표권을 주장하였다(Holbraad 1984, 57-67).

실제로 국제정치학계에서의 중견국 논의의 이론화 및 정교화는 호주 및 캐나다 학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Chapnick 1999). 예컨대 호주 국적 학자 로버트슨(Jeffrey Robertson) 등은 2차 대전 전후처리 과정 이후 오늘날까지 국제정치학계 및 외교 현장에서의 중견국 논의 경향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중견국의 역할이 조망되고 있다고 분석한다(Robertson and Carr 2023, 382-384). 우선 기능주의(functionalism)적 시각이다. 상기 언급한 2차 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 문제와 관련해 당시 캐나다 관료들은 강대국은 아니지만 평화, 안보, 경제·사회 안정 유지에 "기능적 역할"을 하는 국가는, 중견국으로서, 완전히 무력한 국가와 구별되는 제도적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사회과학 연구 방법에 있어 실증주의 조류가 유행한 1970~80년대를 거치면서 중견국 논의에 있어서도 수치 등 객관적 지표를 강조하는 경향이 부상하였다. 즉 경제력, 군사력, 인구, 영토, 외교역량 등 측정 가능한 지표를 통해 국가들을 강대국, 중견국, 약소국으로 분류하려는 학문적 시도가 있었는데, 이를 위계주의적(hierarchical) 경향이라고 한다. 이어 탈냉전기 들어서 국제문제에 대해 다자적 해결책을 추구하거나, 국제분쟁에서 타협적 입장을 선호하는 국가들의 행태에 주목한, 중견국 논의에 있어 행태주의(behavioural)적 시각이 제시되었다.

<표 1> 전통적 중견국 논의 경향

기능주의	위계주의	행태주의	정체성 접근
국제 의제에서 차별화된 역할	실증주의/ 국가역량 지표 평가	다자해결, 중재 역할	해당 국가의 중견국 인식

한편, 2000년대 들어서 기존의 캐나다와 호주를 넘어 스스로를 중견국으로 지칭하는 국가들이 다양한 맥락, 다양한 대륙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로버트슨은 이러한 경향을 중견국의 정체성(identity)적 접근이라고 설명한다. 이들 국가는 중견국 지위가 가진 명성(prestigious)과 이미지에 주목했는데, 로버트슨은 중견국을 자칭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기존 서구 중심을 넘어 중견국 논의가 지역적, 문화적으로 보다 다양해졌다고 언급한다.

로버트슨과 카(2023, 385-386)는 이러한 중견국 논의 경향의 공통성에 주목한다. 첫째, 중견국은 국제주의자(internationalist)라는 점이다. 즉, 2026년 현재 국제정치 질서에 다른 가능성이 전개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중견국들은 2차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관여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왔다는 것이다. 둘째, 중견국은 다자주의자(multilateralist)라는 점이다. 중견국은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려 하며, 다자기구들은 중견국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로버트슨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중견국은 '좋은 국제시민(good citizens)'으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언급한다.

한편, 상기 전통적인 중견국 논의와는 다른 평면인 권력 정치(power politics) 등 국제정치 현실주의(realist) 측면에서 중견국 개념을 조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중견국 개념들은 소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잘 작동할 때, 혹은 특정 국가가 주도하는 질서에 큰 문제가 없을 때, 그 개념이 유의미하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되거나, 혹은 다자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거나 또는 물리적 힘을 기초로, 외교나 협의보다는 갈등이 표면화되는 환경에 처한 경우 기존 논의된 중견국의 역할이 발휘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개념의 유의미성이 제한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 점에서, 중견국을 "구조(structure) 차원 권력 배분을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강대국은 아니지만, 자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권력 자원을 동원해 강대국의 입장을 변화시키거나 자국의 입장을 방어할 수 있는 국가"와 같이 보다 현실주의 측면에서 그 성격을 규정하자는 시각도 제시되고 있다(Shin 2015).

한편, 최근 미국 등 강대국을 중심으로 중견국이 자체적으로나 중견국간 연대 등을 통해 차별화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 터프츠 대학의 베클리 교수(2026)는 2026년 5월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지에 "중견국의 환상(Middle Power Delusion: Not Choosing Is Not An Option)"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중견국들은 자원, 군사 기지, 항만, 공장, 기술, 군대 등 미국과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필요로 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틈새(niche) 자산들이 중견국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자산들은 안보, 기술, 금융, 그리고 시장으로 이루어진 더 큰 시스템에 연결될 때만 비로소 안보와 번영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 힘(structural power)을 가진 국가는 미국이라고 단언한다. 즉 중견국 간의 정상회의나 파트너십은 자율성(autonomy)을 확보한 듯한 착시를 줄 수는 있지만, 강대국이 가진 날 것의 힘(raw power)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표 2 >최근 중견국 논의와 비교

	전통 중견국 논의	최근 경향
기반 이론/시각	자유주의 / 협력 가능성	현실주의 / 권력정치
중견국 역할/목표	다자기구 등을 통한 기능적 역할 -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의제 설정, 중재, 논의 촉진	능력배양, 연대 등통한 역할 강화 - 권력 자원 한계 / 강대국 시각에서 역할은 제한적
등장 배경	2차대전 종결 전후/ UN 등 태동기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대두 / 캐나다 카니 총리의 '26년 다보스 연설 등

이러한 시각은 권력과 힘(power)을 우선시하는 시각에서 중견국 역할의 한계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정치 현실주의 조류와 그 맥이 닿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적 논의를 넘어 미국의 외교, 국방 정책 영역에서도 중견국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미

국방차관 콜비(Colby 2026)는 미국을 배제하는 중견국 연대(middle power alliance)는 그야말로 피상적인 아이디어(superficial idea)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Ⅲ. 과학기술외교와 중견국

1. 전통적 중견국 역할의 시각

그렇다면 과학기술외교, 혹은 첨단기술의 맥락에서 중견국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논의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차례다. 현재 중견국 시각에서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이다.[1] 흥미로운 것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중견국 역할 발휘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논의들이, 앞서 살펴본 전통의 국제정치학 및 외교영역에서의 중견국 논의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중견국의 과학기술외교 관련 경향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앞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2차 대전 이후 중견국 논의를 주도해온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를 대표 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외교', 즉 외교정책적 측면에서의 과학기술외교를 검토해본다는 측면에서 이들 국가가 대외정책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전체 그림 속에서 살펴보기 위해 총리, 외교장관 등 고위급들의 주요 연설이나 해당국가의 전략서 및 싱크탱크 자료를 분석해보았다.

2026년 1월 다보스에서 "원칙과 실용: 캐나다의 길(Principled and pragmatic: Canada's path)"이라는 연설을 통해 오늘날 중견국의 역할을 재환기한 캐나다의 카니 총리(2026a)는 3월 호주 로위 연구소(Lowy Institute)에서 유사한 발언을 했다(Carney 2026b). 그는 오늘날 세계 질서(world order)는 기존 규칙 기반 국제질서(rules based international order)가 붕괴되는 단절을 겪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캐나다, 호주와 같은 중견국이 이러한 단절을 극복하고, 인권 존중, 지속가능한 발전, 연대, 주권, 영토 보전 등의 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지점에서 카니 총리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는 오늘날 주권은 우주 기반 통신과 반도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을 필요로 하며, 나아가 인공지능, 디지털 주권, 핵심광물, 결제 시스템, 청정에너지 기술, 백신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한다. 즉 카니 총리는 새로운 질서 형성과 외교의 중요 요소로 첨단과학기술을 언급하고 있다.[2]

한편, 카니 총리는 동 연설에서 중견국 역할에 주목했는데, 그는 진정한 주권은 고립 속에서 달성될 수 없으며 파트너십을 필요로 한다면서, 강대국들처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중견국은 소집할 수 있고(convene), 의제를 설정할 수 있으며(set the agenda), 규칙을 형성할 수 있고(shape the rules), 연합을 통해 역량을 조직하고 구축함으로써 빠른 속도와 세계적 규모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즉 전통적으로 논의되어온 중견국의 역할을 새로운 질서 형성의 중요 역량으로 조명한 것이다. 카니 총리는 이를 다자주의의 진화(multilateralism's evolution)라고 역설하였다.

모나 네머(Mona Nemer) 캐나다 최고과학고문의 2025년 연설은 캐나다의 과학과 외교에 대한 시각을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준다(Nemer 2025). 그는

1) 제국 차원(The British Empire)의 국가였던, 영국의 오늘날 국제정치에서의 역할과 위상이 중견국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이 점에서 본고의 영국의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중견국 맥락에서 검토는 영국 정부 및 연구기관이 스스로를 중견국으로 언급한 문헌과 발언 등에 기초하였음을 밝혀둔다.

2) 과학기술, 첨단과학기술, 핵심신흥기술(CET: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은 때에 따라 혼용되기도 하고, 또는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용어 자체를 정밀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는 않았음을 밝혀둔다.

과학과 외교는 상호를 필요로 한다면서, 외교는 국가들이 함께 일함으로써 얻는 상호 이익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언급한다. 한편, 그는 과학은 외교를 위한 강력한 도구(powerful tool for diplomacy)가 될 수 있는데 예컨대, 과학이 글로벌 남북관계를 증진하거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달성을 위한 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네머 고문은 과학외교관(science diplomats)은 지정학적 긴장을 넘어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국제관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호주 외교부는 호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익 수호를 위해 협력, 연구, 혁신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호주의 강점을 증진하는 것을 과학외교(science diplomacy)의 일환으로 본다(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이러한 배경 아래, 호주 역시도 위에서 살펴본 캐나다의 사례와 유사한 맥락에서 외교에서의 과학기술 역할에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은 2025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호주와 같은 "적극적 중견국(assertive middle powers)"은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기존 및 새로운 연합(coalition)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호주는 이러한 노력을 UN뿐 아니라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 ASEAN, G20, APEC, Quad, CANZ, MIKTA 등 다양한 다자·소다자 무대를 통해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Wong 2025). 이러한 맥락에서 호주는 다자적으로만 달성 가능한 글로벌 공공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UN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AI를 포함한 기술, 기후변화, 현대적 분쟁, 인구 이동 등 미래 도전에 대응하는 역량이 UN 개혁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 새로운 경향 : 현실주의적 시각

한편, 우크라이나 침공,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 2026년 3월 이란 전쟁을 겪으며 국제정치에 '우아한 위선의 시대가 저물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이문영 2026). 이른바 길게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짧게는 탈냉전기 이후 형성 및 강화된 규칙기반 자유주의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러한 국제정치 경향 변화를 반영하듯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보다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중견국의 역할을 주문하는 의견도 종종 발견된다.

예컨대, 리즈 켄달(Liz Kendall) 영국 과학혁신기술부(Secretary of State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장관은 2026년 4월 영국 왕립군사문제연구소(RUSI)에서의 "Rebuilding Britain for the New World" 제하 연설을 통해 영국의 핵심신흥기술 분야 정책 추진방향을 언급하였다. 그는 지난 40년간 지속되어온 지정학적 질서가 균열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이 불과 몇 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방식으로 우리의 경제와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고 진단한다. 즉 지정학적 경쟁(geopolitical rivalry)과 기술 발전(tech boom)이 상호 추동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결과 혼란의 시대(age of disruption)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Kendall 2026). 이러한 맥락에서 켄달 장관은 핵심신흥기술이 국가들의 권력(power)의 원천으로 작동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특히 AI와 관련하여, 그는 AI를 활용하는 국가들은 질병 치료, 신소재 발견, 빅테크 기업 창출 경쟁에서 앞설 뿐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군대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면서, 명시적으로 AI가 국가들의 경제력과 물리적 역량(hard power)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켄달 장관의 연설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현실주의적 시각이 중견국 협력의 방향성에 투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존 중견국의 역할 – '좋은 국제시민'의 전제 아래 다자주의를 기초로 국가 간의 협력 촉진 – 을 넘어, 켄달 장관은 중견국들이 AI가 어떻게 배치·활용될 것인지에 관한 표

준(standards)을 설정하거나, 공통 우위와 경쟁력을 공유하는 AI 가치사슬 일부에 공동 투자하는 방안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즉 중견국 간 협력의 목표로 국제질서 유지와 협력 촉진을 넘어, 중견국들의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역량과 능력 제고, 즉 국제정치적 용어로 재서술한다면 힘(power)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켄달 장관은 연설에서 "점점 더 변동성이 커지고 양극화된 세계(bi-polar world)에서, 우리는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like-minded nations)과 협력할 때 영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s)이 강화된다"고 재확인하고 있다.

결국 정리한다면, 현시점 중견국의 과학기술외교는 크게 두 가지 경향에서 전개되고 있는 점이 관찰된다. 우선 국제정치이론에서 그간 논의되어온 전통의 중견국 논의에 부합하게, 국제주의를 기초로 UN, G7, G20, APEC, OECD 등 다자 무대를 중심으로 중견국이 과학기술과 관련한 국가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관련 거버넌스(governance), 규칙(rules)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의제 조정자나 협상촉진자 등 중견국 전통의 역할에 부합한다. 자연히 해당 영역에서의 과학기술과 관련한 논의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포용성(inclusivity), 그리고 안전(safety)과 신뢰(trustworthiness) 등 다자무대에서 중견국이 지향해온 전통의 가치와 방향성을 증진하는 것과 관련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캐나다가 의장국을 맡은 2025년 G7에서는 히로시마 AI 프로세스(HAIP: Hiroshima AI Process)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배치를 위한 다자 이해관계자 논의를 이끌고,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방향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2025). 아울러 과학기술 이슈를 논의하는 다양한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여타 전통적 이슈 영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와 호주 등이 논의 및 결과물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는 등 "논의 촉진자"와 같은 전통적인 중견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도 많다.

한편, 또 다른 경향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견국들이 각각 점한 위치와 장점에 기초하여, 상호 연대를 통해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의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미·중간 경쟁 심화 및 이에 비례해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약화 국면에서 이러한 '현실주의'적 중견국 역할론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실질적인 중견국간 협력 영역도 제기되고 있는데, 예컨대 중견국들은 미국과 중국처럼 AI 초대형 모델 경쟁에서 필요한 규모와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아래, 모델보다는 AI 배치(deployment)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공공 조달, 표준화, 인증체계의 공동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 등이 그러한 예이다(McDonald et al, 2026). 이러한 논의는,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견국 스스로가 자신의 역량, 국제정치적 용어로 언급한다면 권력(power)을 증진해야 한다는, 상기 살펴본 현실주의적 중견국 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캐나다 및 호주의 과학기술에 대한 논의 역시도 중견국의 과학기술외교와 관련해 상기의 두 가지 시각을 함께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2026년 6월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캐나다 국가 AI전략(Canada's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AI for All)은 AI가 캐나다의 번영과 캐나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그 목적을 명시한다(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2026). 아울러 AI는 경제성장과, 생산성과 지정학적 영향력의 근원이라고 본다. 이는 과학기술을 국가이익이나 권력의 시각에서 보는 입장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AI전략에서 캐나다는 다자간 소버린 기술 동맹(sovereign technology alliance)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언급하면서, 캐나다가 책임감 있는 혁신, 포용적 거버넌스, 다자협력에 대해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을 바탕으로, 기술적 진보와 공공의 신뢰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글로벌 AI 규범 형성을

추동해나가겠다고 언급한다. 이는 중견국의 전통적 역할에 기초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여간 스스로 중견국의 정체성을 언급하는 국가들의 논의에서 공통점으로 발견되는 지점은, 이들 국가들이 모두 국제정치에서 과학기술의 역할과 영향력에 일찍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강대국에 비해 항상 새로운 틈새외교 영역(niche diplomacy)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해야 하는 중견국의 숙명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논의의 함의

상기 논의는 중견국의 과학기술외교 전개 노력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는가? 앞서 살펴본 2026년 1월 캐나다 카니 총리의 다보스 연설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최근의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중견국 논의는 기존 서구 중심의 질서가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아래 중견국들이 주도적으로 이에 대한 대안적 세계질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카니 총리의 중견국 언급이 국제정치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한지, 중견국이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Beckley 2026). 따라서 한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견국 외교를 지향한다고 할 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중견국 용어가 주는 이미지(image) 그 이상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견국은 정치, 군사, 경제 등 전통적인 국제정치의 영역에서는 강대국보다 동원할 수 있는 권력 자원이 부족한 국가라는 것은 자명하다. 특히 한국은 그 지정학적 위치상, 그리고 관련된 다양한 관계를 감안할 때, 간헐적인 수준이 아니라 매일,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과 상호작용에 직면한 국가다. 한편, 과학기술은 국가 간 상호작용의 중요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아울러 과학기술은 정치, 군사, 경제 등 기존 국제정치영역과 연동되어 그 영역에서 국가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실질적, 잠재적 영향력을 감안해 이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차원의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논의 역시도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아래, 기존 국제정치이론과 실무에서의 전통적인 중견국 논의, 그리고 과학기술외교 특성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중견국 외교는 아래의 영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다자외교(multilateral diplomacy)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수행 및 강화 노력이다. 전통적으로 국제사회의 규칙은 다양한 다자 플랫폼을 통해 형성되고 강화되어 왔다. 특히, AI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도 최근 이러한 경향 속에 있다. 특히 2020년대 이후로 핵심신흥기술은 OECD, UN, G7, G20 등 다자 플랫폼에서의 주요 의제로 자리잡고 있다. 2025년 경주 APEC에서 의장 경제인 대한민국 주도로 채택된, APEC 최초의 AI 분야 정상합의 문서인 'APEC AI 이니셔티브(APEC AI Initiative: 2026-2030)'는 대내외적으로 중견국으로 언급되는 국가의 과학기술외교가 다자무대에서 전개되는지,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 21개 APEC 회원 경제가 채택한 이 성과 문서는 'AI 대전환(AI Transformation)' 등 2025년 11월 기준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합의 지점을 보여주며, 향후 주요 논의에 있어 유용한 준거 및 참고점을 제공한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AI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상문서 채택을 주도했다는 점은, 문서 채택이라는 가시적 성과 이외에 무형적 의미를 내포한다.

다자무대에서의 문서 채택은 그 준비 과정에서부터 의장국과 여타 회원국 및 회원 경제와의 긴밀한 소통을 필요로 한다. 특히 AI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의 성공적 문서 채택은, 미국, 중국 등 AI 관련 주요 강대국 및 캐나다, 호주 등 국제사회의 주요

중견국, 아세안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 및 러시아 등 핵심신흥기술에 대해 각각의 견해를 가진 국가들이,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 있어 그 중재자와 조정자로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있다(이주관 2025). 그리고 이러한 신뢰는 중견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무형적 기초가 된다.

둘째, 과학기술외교를 통한 한국의 국가역량 강화 및 강화된 역량의 활용이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과학기술의 역량에 주목해왔다. 예컨대 과학기술은 모겐소(Hans J. Morgenthau)가 언급하는 권력의 원천 중 하나이다. 모겐소는 과학기술을 별도의 권력 요소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의 산업 능력을 설명할 때 이를 암묵적으로 포함시켰다. 예컨대 모겐소는 강대국을 다른 국가와 구분하는 한 요소는 그들의 산업적 자급자족 능력과 다른 국가들에 앞선 기술역량(technological capacity)이며, 국력(national power)에 있어 이러한 산업 역량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언급한다(Morgenthau 2005).

흥미로운 점은 과학기술을 협력의 기제보다는 이렇게 국가역량의 원천이자 안보, 지정학적 경쟁에서의 우위를 위한 매개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자의 시각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구글 등 과거 빅테크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현 미 국무부 경제차관 제이콥 헬버그(Jacob Helberg)는 핵무기에 대한 한스 모겐소의 견해를 언급하면서, 가공할 파괴력 때문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냉전시대의 핵무기와는 달리, 주로 민간 기업이 상업·민간 목적으로 개발한 이중용도(Dual-use) 기술을 통해 치러지고 있는 최근의 전쟁(gray war) 양상은, 제한적 타격 등 그 합리적 사용 가능성을 감안시, 적국에 대해 파급력이 큰 공격을 가하는 데 한층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Helberg 2021, 14-15).

이렇듯 과학기술의 특이점은,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군사, 경제, 문화 등 다른 국가 요소와 결합하여 해당 영역에서의 역량을 증폭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GDP 규모 차원에서 강대국에 비해 작은 능력을 가진 국가가 신흥기술의 핵심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병력 및 장비의 숫자 등 전통적인 군사력 지표가 부족한 국가라도 신흥기술을 활용해 그 전력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AI의 군사 분야에서의 이용, 피지컬 AI의 현실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역량 증진의 기제로서 핵심신흥기술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요즈음이다. 결국 중견국 과학기술외교의 또다른 한 측면은, 과학기술을 통해 어떻게 국가역량을 효율적으로 증진할 것인지, 그리고 이 증진된 역량을 대외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 것인지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고의 논의는 "중견국의 과학기술외교를 언급할 때, 의미하는 중견국은 무엇인가?", "강대국 및 약소국과 대별되는 중견국의 과학기술외교는 무엇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인가?"의 문제의식에 바탕을 둔다.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중견국은 외교사 맥락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는 개념이다. 현대적 의미의 중견국 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캐나다와 호주가 주도하였다. 그간 국제정치이론의 시각에서 중견국은 그간 국제주의자, 다자주의자 등 국제사회의 좋은 국제시민으로서 그 기능이 조망되어 왔다. 한편, 기존 논의와는 다르게 권력정치 등 국제정치 현실주의측면에서 중견국 개념을 조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견국의 과학기술외교는 캐나다와 호주를 중심으로 강조되어 왔는데, 이러한 국제정치 영역에서의 중견국 논의와 그 맥이 닿아있다. 예컨대 전통의 중

견국 논의에 부합하게, 국제주의를 기초로 UN, G7, G20, APEC, OECD 등 다자 무대를 중심으로 중견국이 과학기술과 관련한 국가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에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편, 또 다른 경향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견국들이 각각 점한 위치와 장점에 기초하여, 상호 연대를 통해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의다. 이러한 논의는,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견국 스스로가 자신의 역량, 국제정치적 용어로 언급한다면 권력(power)을 증진해야 한다는, 상기 살펴본 현실주의적 중견국 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중견국의 정체성을 언급하는 국가들의 논의에서 공통점으로 발견되는 지점은 이들 국가들이 공히 국제정치에서 과학기술의 역할과 영향력에 일찍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강대국에 비해 항상 새로운 틈새외교 영역(niche diplomacy)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해야 하는 중견국의 숙명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논의는 과학기술 분야를 넘어 중견국의 외교정책 구상과 실행에 정책적 함의를 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상배 (2025). 미중 인공지능 패권경쟁과 한국: 국제정치의 전환과 중견국의 국가전략. 국가전략, 31(2), 101-132.

신동민, 박경렬. (2025). 과학기술외교 개념의 재모색: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미래사회, 16(3), 104-117.

윤정현 (2025). 미중 강대국 AI 질서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전략. 21세기정치학회보, 35(3), 133-162.

이문영. (2026, 4월 18일).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 「교수신문」.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11 (검색일: 2026. 8. 5).

이주관 (2025, 11월 10일). 「왜 단어 하나에 밤을 새웠나: 경주 APEC이 쓴 '미래의 문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108 (검색일: 2026. 8. 5).

전재성. (2026, 8월 25일). 「드론-AI-데이터 전쟁, 대북 억제의 판이 바뀐다」.. 「동아일보」. (검색일: 2026. 8. 25).

Abbondanza, G. (2020). Middle Powers and Great Powers through History: The Concept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Day.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41*(3), 397-418.

APEC. (2025, November 1). APEC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itiative (2026-2030). 2025 APEC Leaders' Gyeongju Declaration.

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n.d.). Science Diplomacy. https://www.dfat.gov.au/people-to-people/public-diplomacy/Pages/science-diplomacy (검색일: 2026. 8. 5).

Beckley, M. (2026). The Middle Power Delusion: Not Choosing Is Not An Option. *Foreign Affairs, 105*(3).

Carney, M. (2026a, January 20). Principled and Pragmatic: Canada's Path. Prime Minister of Canada.

Carney, M. (2026b, March 4). Remarks at the Lowy Institute in Sydney. Prime Minister of Canada.

Chapnick, A. (1999). The Middle Power. *Canadian Foreign Policy Journal, 7*(2), 73-82.

Colby, E. (2026, May 14). Remarks by Under 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Elbridge Colby at the Stratbase Institute in Manila, Philippines. U.S. Department of Defense. https://www.defense.gov/News/Speeches/Speech/Article/3784102/ (검색일: 2026. 8. 5).

Government of Canada. (2025). Implementing the G7 AI Adoption Roadmap. Government of Canada.

Government of Canada. (2026). Canada's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AI for All.

Helberg, J. (2021). *The Wires of War: Technology and the Global Struggle for Power.* Avid Reader Press.

Holbraad, C. (1984). *Middle Powers in International Politics.* Macmillan.

Kendall, L. (2026, April 28). Rebuilding Britain for the New World: Liz Kendall's Speech at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UK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and Technology.

McDonald, B., Attridge, C., & MacEachern, A. (2026, February 25). Middle Powers Must Win the AI Deployment Rac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Morgenthau, H. J. (2005).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7th ed.). McGraw-Hill Higher Education.

Nemer, M. (2025, April 17). Promoting Science, Strengthening Diplomacy. Office of the Chief Science Advisor of Canada.

Robertson, J., & Carr, A. (2023). Is Anyone a Middle Power? The Case for Historicization. *International Theory, 15*(3), 384-407.

Shin, D. (2015, December 4). A Critical Review of the Concept of Middle Power. *E-International Relations.* https://www.e-ir.org/p/a-critical-review-of-the-concept (검색일: 2026. 8. 5).

Wong, P. (2025, October 22). UN at 80: Shaping Our Future Together. Conference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Australia. Australian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투고일자: 2026. 8. 28.
심사일자: 2026. 10. 6.
게재확정일자: 2026. 10. 9.

미래사회
Journal of Future Society
2026. Vol. 17, No. 3, 458~469.
https://doi.org/10.22987/jifso.2026.17.3.458

Middle Power and Science Technology Diplomacy

Dongmin Shi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is study addresse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hat constitutes middle power?" and "What does middle power science and technology (S&T) diplomacy prioritize?"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of middle power theory and practice, this study analyzes how Canada and Australia, key leaders in middle power discourse, operationalize their roles in S&T diplomacy. While middle powers have traditionally been conceptualized as multi-lateralist "good citizens", recent debates highlight the necessity of viewing them through political realism. Correspondingly, the cases of Canada and Australia reveal two main tendencies in S&T diplomacy: first, contributing to global S&T governance in multilateral arenas such as the UN and G20, and second, bolstering national capabilities based on strategic strengths, a realist approach emphasizing power enhancement. Crucially, self-identified middle powers commonly recognize the strategic leverage of S&T in global politics. This demonstrates that S&T diplomacy is an essential instrument for middle powers seeking to maximize their influence through niche diplomacy.

Key words: Science Technology Diplomacy, Middle Power,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nada, Australia